

동향과 분석

〈2013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2013년 상반기 북한경제: 북한 군사도발의
경제적 귀결

이석

2013년 상반기 실물 및 산업부문 동향

이석기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 동향

이종규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 및 농업

김영훈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동향과 평가

양문수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msyang@kyungnam.ac.kr

I. 머리말

김정은 시대에도 이른바 경제문제가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최초의 공개연설을 통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 수행에서 전면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 4월 1일에는 북한판 경제개혁의 기수인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임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정부는 2013년 상반기에 시장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시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북한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부세계가 입수 가능한 정보와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시장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북 소식지라 하여 북한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외 언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과 대표성 등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한편, 본고에서의 ‘시장’에 대해 간단히 개념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개 ‘시장’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과 같이 장소·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떠올리게 되고 북한의

시장이라 하면 대개 장마당으로 불리는 소비재시장을 연상하는데, 이는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은 장소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 경우 시장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

II.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1.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

2013년 상반기에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기조는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허용이고, 부분적으로는 축진이었다고 볼 수 있다. 3~4년 전과는 판이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북한정부는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종합시장(장마당)에 대해 직접적인 폐쇄조치까지 시도했지만 물가폭등, 상품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견잡을 수 없게 되자 2010년 2월 초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나아가 5월에는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즉,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단속·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집회, 군사훈련 및 대피훈련 등 각종 동원이 빈번했으며, 이와 관련해 종합시장 개장시간 통제 및 일시적 폐쇄 조치도 취해지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

예컨대, 북한정부는 1월 말 전투동원태세를 발령해 군부대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교도대, 노동적위대 등 민간 예비전력을 대상으로 전투진지 차지(점령) 훈련 등을 실시했다. 설 명절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계기로 전쟁 분위기가 완화됐지만, 2월 말부터 다시 내부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하면서 모든 간부들과 주민들이 국방색

1) 시장 및 시장화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컨대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 2010, pp. 222~225를 참조.

2) 『데일리NK』, 2013. 2. 21; 2013. 3. 11; 2013. 4. 1.

복장과 모자에 위장망을 하고, 자동차에는 '전조등 가림판', 버스에는 위장망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일꾼들이 갭도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농장원들은 대피훈련이나 갭도진입훈련도 실시했다. 여기에 거의 매일 공습경보 및 핵경보 시의 대처요령에 대해 방송하고, 구역 인민위원회가 인민반별 비상연락망 가동 검열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도 긴장된 분위기다.

북한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당·군 조직을 총동원해 전투태세 준비에 나섰다. 더욱이 미국의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현하자 '1호 근무태세'를 발령하고 심야에 비상작전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군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회의와 강연, 쫓기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경축행사를 지역별로 개최하면서 종합시장 개장시간 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기관·기업소 노동자들과 일반 주민들은 빠짐없이 강연회와 경축행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단속과 통제는 2007년부터 2010년 초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시장에 대한 전면적 단속·통제와는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다. 2013년 상반기에 시장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제한적·일시적·국지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정부는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라고 인식하는 시장에 대해 왜 특별한 통제·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더욱이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고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생활로 눈을 돌려보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새로운 북한 지도부는 '먹는 문제'로 대표되는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인민생활 향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28방침'의 실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시범운영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당분간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정책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시장을 허용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교육지책이다.

2. '6·28방침'과 시장화

하지만 올 상반기에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기조는 허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일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6·28방침’으로 알려진 경제관리개선조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 내에서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 불리다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표현이 바뀐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도입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8방침’은 애초 북한당국이 지난해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내부적으로 공표한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 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방침인지, 계획인지, 조치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 실체의 존재 여부를 놓고도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6·28방침의 본격 시행은 계속 미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몇 차례 시범운영을 하다가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시범운영의 소식은 꾸준히 들려왔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정부 스스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또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경제개혁적 조치들을 외부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5월 15일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 완성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김정은 원수님의 관심 속에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생산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철저한 협의에 기초하여 밀고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조선(북한)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내각의 지도 밑에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경영관리를 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생산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돋우고 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국가계획을 달성한 일부 농장들이 현물분배를 실시했고 공장, 기업소에 독자적인 판매권과 무역권이 부여됐으며 이러한 내용은 현장 근로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내각에서는 연구기관들,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경제관리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회,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안’들은 일부 생산단위들에 시험 도입하고 성과를 확인한 뒤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게 된다.”며 “지금 내각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수시로 료해(파악)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선신보』는 이러한 시도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김 부부장과 리 부국장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군들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3년 신년사에서 이러한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했음을 상기시켰다. 『조선신보』는 아울러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이 제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연구 완성은 중요 과업으로서 언급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선신보』는 이러한 시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완성하는 것은 김정일 장군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업”이라며 “조선(북한)에서는 2002년 이후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최대의 실리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일 미국 AP통신은 북한이 지난 4월 1일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³⁾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단위가 더 작은 규모로 조직되고 각 단위가 담당 농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모든 수확분을 국가에 바쳐야 했던 과거와 달리 각 단위가 잉여 농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 동봉협동농장 관리위원회의 김종진 부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생산 열의가 고취되고 생산한 양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몫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공장·기업소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가 표준임금을 결정해 일정액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경제조치로 임금통제가 완화돼 기업소들이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개별 근로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방침이 4월 1일에 결정됐으며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실행에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3) 『연합뉴스』, 2013. 6. 1.

이러한 새로운 경제조치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7·1조치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04년에 일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시범운영되었던 조치보다 경제개혁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운영의 성과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초보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일부 농장, 공장에서 적용단계에 들어섰는데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들이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널리 선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배급제, 가격 및 임금 체계, 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의 운영체계 재편이 불가결하다.⁴⁾ 북한당국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 부부장과 리 부국장이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거기에 맞게 법·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새로운 경제조치들의 진행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힌 올해 5월 15일자 『조선신보』 기사 제목이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 완성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 김 부부장과 리 부국장이 인터뷰에서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고 강조한 것들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 및 시범운영은 북한의 시장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시장을 일정 정도 합법화한 7·1조치가 북한의 시장화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7·1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⁵⁾ 이 조치는 현실과 공식 제도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워 주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즉,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적 또는 반(半)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시범운영’되고 있다면 이 또한 ‘시장 친화적’ 상황이다. 북한정부로서는 시범운영의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같은 반(反)시장화 조치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시범운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 「김정은 체제 개혁·개방 전망: ‘6·28방침’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발표자료, 2012, 8 참조.
5) 박형중, ‘6·28 방침 1년의 내용과 경과」,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3, 6, 14.

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 완성에 찬물을 끼얹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시장에 대해 묵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Ⅲ. 시장 및 주민생활 관련 동향

1.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2013년 상반기에 북한의 시장은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장마당)의 경우, 1월부터 3~4월까지의 약간 위축되었으나 이후에는 크게 활기를 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집회, 군사훈련 및 대피훈련 등 각종 동원이 빈번했으며, 이와 관련해 종합시장 개장 시간 통제 및 일시적 폐쇄 조치도 취해지곤 했다. 여기에도 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차원에서 북중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올 2월 이후 북한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통관비용을 올리고 검사비용(무작위 선정 검사)도 상향 조정했다. 북한은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할 경우 일정한 통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중국 세관은 화물차를 무작위로 선정해 수입품을 검사해 왔다.

대북 소식통들은 “지난 4월까지 중국 해관(세관)은 예전보다 많은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했고, 특히 허가된 수입품 이외의 물품을 끼워 수입하던 관행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업체들은 “북한과 무역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결국 북중 무역거래가 다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종합시장(장마당)이 다소 위축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⁶⁾

하지만 4월부터 북한 내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종합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4~5월부터는 북중교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조치가 완화되면서 북중무역량이 다시 늘어나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종합시

6) 『데일리NK』, 2013. 5. 1; 2013. 5. 10.

장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한다.⁷⁾ 최근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어느 화교는 모처럼 장사가 잘되는 바람에 자신을 비롯한 보따리 상인들이 그동안 팔리지 않아 쌓여 있던 재고를 모두 처분했고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청진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한다는 또 다른 화교 무역상도 “최근엔 장마당이 제대로 돌아가서 장사가 잘되는 바람에 중국제 상품공급이 달리는 형편”이라고 말했다.⁸⁾

한편, 최근 북한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북한의 휴대전화 열풍이다. 북한의 유일한 이동통신업체인 고려링크에 가입한 북한 주민의 수가 지난 5월 28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고려링크의 모회사인 이집트 통신회사가 밝혔다.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 Telecom Media & Technology: OTMT)사의 나기브 사위리스(Naguib Sawiris)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북한의 손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위리스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짧은 기간에 200만명 가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사위리스 회장은 북한 진출 초기만 해도 소수의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2008년 가입자 10만명이 사업타당성을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라고 밝혔지만, 5년 만에 진출 초기 목표의 20배를 넘겼다고 말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008년에는 가입자 수가 1,600명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 이용자들이 평양을 비롯해 북한 내 15개 주요 도시 그리고 100여 개의 중소도시에 분포해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 200만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가입, 기관명의 가입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200만명’은 오늘날의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하나를 구입하는 데 적어도 200~300달러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규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2010년 5월 이후 시장의 발달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날의 북한사회를 평가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 ‘양극화’가 적절한 표현인지 곱씹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든 주민들의 현금소득이든 최소한 평균적으로 본다면 북한사회는 2009년 11~12월 말의 화폐개혁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났

7) 『데일리NK』, 2013. 4. 1; 2013. 5. 10.

8)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2013. 5. 16.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달러화와 위안화의 가속화

북한에서는 2009년 11~12월의 화폐개혁 이후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9년 화폐개혁 전에도 달러라이제이션⁹⁾은 진행되고 있었다. 암시장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국 화폐를 기피하고 외국 화폐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런데 7·1조치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고 주민들의 현금 보유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2009년 화폐개혁조치는 주민들로부터 북한 원화를 대량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북한 원화 가치의 폭락, 외화 환율의 폭등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 원의 보유를 기피하고 달러화나 위안화 등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북한에서는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달러화(dollarization)와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는 위안화(yuan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중무역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비공식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자산의 축적이나 교환에 있어 달러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국경지대에 서만 인민폐가 유통되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중국 관광객 정도만 인민폐를 사용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북한 내에서 인민폐의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제 국경지대만이 아니라 일부 내륙지역, 특히 평양에서도 인민폐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달러화(dollarization)보다 위안화(yuanization)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북한에서의 달러와 인민폐의 상대적 위상 변화는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의 억제·촉진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위안화를 중심으로 억제 및 촉진 요인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9) 외화통용현상을 가리켜 흔히들 '달러화(dol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미 달러만이 아니라 유로를 비롯한 다른 외화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달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세계 기축통화로서 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외화 사용을 통틀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인 북한 원을 기피하고 외화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외화가 자국 화폐를 일정 정도 대체해 가는 현상이다.

위안화의 억제요인(달리 보면 달러화의 촉진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달러화는 태환화폐이지만 인민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북중 간의 무역거래 시 결제는 인민폐가 아니라 달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외화자산의 축적 역시 달러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위안화의 경우, 억제요인도 있지만 촉진요인이 더 많은 편이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접경국가의 특성상 인민폐가 달러화보다 조건이 양호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대부분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무역 또한 사실상 중국과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8년부터 북한과 중국 간에 인민폐를 통한 무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부터 북중 간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중 간 무역에서 인민폐를 통한 결제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셋째, 단속 시 처벌의 측면에서 인민폐가 달러보다는 유리하다. 일반 주민이 합법적으로 달러를 가지게 될 기회는 매우 드물지만 인민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민폐 환율이 달러 환율보다 낮기 때문에 소규모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를 매개하는데 있어 인민폐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보아 인민폐 환율이 절상되는 추세에 있다. 즉, 달러화 보유보다 인민폐 보유가 환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¹⁰⁾

『데일리NK』가 최근 입수한 양강도 혜산시장, 김형직군 고읍시장 등의 동영상에 의하면, 상인들 대부분이 북한돈이 아닌 중국 위안화 가격으로 흥정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물가의 기준 지표가 되는 쌀도 위안화로 거래됐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쌀을 비롯해 점퍼, 머플러, 장갑, 동복(코트) 등 겨울의류에서 화장품, 향수, 치약, 칫솔 등 생필품까지 모두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었다. 영상이 촬영된 2월 중순 현재 혜산시장에서 중국산 쌀가격은 4.6~5위안이었고 북한산 쌀은 4.8~5위안에 거래되고 있었다.

촬영자가 곡식 매대(좌판)에 다가가 “중국 쌀은 얼마고 우리 쌀은 얼마요?”라고 묻자 상인은 “중국 쌀은 4.6위안짜리가 있고 우리(조선) 쌀은 4.8위안부터 5위안까지 있다.”고 답했다. 촬영자가 재차 “우리 돈으로 얼마요?”라고 하자 상인은 “중국 쌀은 우리 돈으로 6,600원, 우리 쌀은 우리 돈으로 7,000(원)에서 7,400까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겨울의류 매대에서 중국산 아동 동복은 140위안, 성인 신발은 250위안에 거래됐다. 중고옷 매대에서도 중국산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동 동복이 65위안이었다. 또 중국 창바이(長白)산 바지는 80위안, 조끼는 100위안, 중국 향수는 60위안 등으로 거래됐다.

이러한 종합시장(장마당)에서의 위안화 사용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장사꾼들의

10) 위안화(yuanization)의 억제요인 및 촉진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석기 외, 『북한의 외화통용 실태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2, pp.118~124 참조.

위안화 사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사꾼들은 위안화를 숨겨 소지하고 북한 돈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혜산시장 주변 골목장 장갑 매대에서의 위안화 거래 장면에서는 촬영자가 “장갑 얼마요?”라고 묻자 매대 여인이 “이건 8위안짜리고 10위안짜리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촬영자가 50위안을 건네고 “잔돈 달라.”고 하자, 여인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잔돈을 촬영자에게 건네면서 “너무 단속해서 (공식시장에서 골목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혜산에서는 90% 이상의 장사꾼들이 위안화로 거래한다. 특히 장마당은 쌀까지도 중국처럼 4~5위안 하면서 사고판다.”면서 “통제를 심하게 하지만 그래도 위안화를 다 사용한다. 조선 돈을 믿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고 말했다.¹¹⁾

IV. 물가 및 환율 동향

2013년 상반기 북한의 물가 및 환율 동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4월 이후 시장 쌀값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과 <그림 1>에도 나타나 있지만 올해 4, 5, 6월에는 쌀값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쌀값의 하락세는 환율의 하락세보다 가파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그림 2>에도 나타나 있지만 달러로 표시한 쌀값은 급격하게 하락해 평양의 경우, 1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북 소식지들은 국가의 배급 확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북한정부는 오는 9월부터 배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 배급량을 늘리고 있다. 배급 정상화 방침에 주민들과 장사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평양 소식통은 “지난 3월 상순과 하순에 각각 5일분과 10일분의 배급이 된 데 이어 4월 상순에도 5일분의 배급이 나왔다.”면서 “당국은 매달 10일분을 배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급을 완전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일분은 노동자 4.5kg, 부양가족 2kg으로 총 6.5kg가량이다.

이어 소식통은 “주민들은 처음에 (배급 정상화 방침을) 믿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보름분에 이어 4월에도 5일분이 배급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보름분 배급에도 ‘이번 달만 주고 끝나겠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4월 초에 배급이 이뤄지면서 배급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 『데일리NK』, 2013. 4. 16.

국경지역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배급은 평안북도 신의주를 비롯해 양강도 혜산, 함경북도 회령·새별·청진 등에서도 실시됐다. 특히 소식통은 이번 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식구 수에 맞춰 보름치(15일 분)라며 배급이 이뤄졌다.”면서 “옥수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쌀은 질이 떨어졌지만 6월 중반까지 5일분, 10일분으로 배급을 줘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평양 소식통도 “지난 6월 중순 햇감자를 중심으로 당국에서 배급을 줬다.”면서 “배급이 이뤄진 이후 시장에 곡식들이 많이 나와 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이뤄지면 시장 쌀 수요가 감소해 시장 쌀가격이 하락한다. 특히 간부들은 배급된 쌀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 쌀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월 중순부터 농장원들에게 햇감자가 배급돼 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확에 동원됐던 주민들이 뒤로 빼돌린 감자를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정부가 감자기 배급을 늘린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소식자들은 북한정부가 2호미라 불리는 전쟁 예비물자(전시 비축미)를 풀었다고 전하고 있지만¹²⁾ 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급물량 확대가 시장의 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적 요인도 지적해야 한다. 즉, 지난해 하반기부터 쌀값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것은 우선 6·28방침의 내부적 공포와 또 한 차례 화폐개혁(화폐교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북한정부가 전쟁 분위기,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낀 것도 무시 못 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사재기 및 투기까지 가세해 환율 및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하나의 악순환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 4월부터는 이러한 불안심리가 상당 정도 해소되면서 쌀값의 안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2) 예컨대 『데일리NK』, 2013. 7. 2.

〈표 1〉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 쌀가격 및 환율의 변화

	환율(1달러당 북한 원)			쌀값(북한 원)			쌀값(달러)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2009. 11. 9~11. 22	38	38	38	22	22	23	0.578
2009. 12. 9~12. 15	-	-	-	44	46	44	-
2009. 12. 30~2010. 1. 4	134	130	133	55	53	60	0.410
2010. 1. 8~1. 14	215	217	220	210	190	200	0.977
2010. 2. 2~2. 8	395	400	405	370	350	360	0.937
2010. 2. 17~2. 23	500	510	515	470	450	450	0.940
2010. 2. 25~3. 3	2,300	2,500	2,350	950	1,000	1,200	0.413
2010. 3. 2~3. 8	2,300	2,500	2,350	1,300	1,100	1,450	0.565
2010. 3. 9~3. 23	1,100	1,050	1,000	700	600	700	0.636
2010. 3. 26~4. 1	600	550	600	200	200	250	0.333
2010. 4. 1~4. 7	700	700	750	450	450	500	0.643
2010. 4. 8~4. 26	1,000	900	900	500	500	530	0.500
2010. 4. 26~5. 6	900	800	850	400	380	400	0.444
2010. 5. 7~5. 25	1,000	900	950	450	430	450	0.450
2010. 6. 26~7. 5	900	1,050	1,000	550	600	570	0.611
2010. 7. 7~7. 13	900	1,085	1,050	600	650	750	0.667
2010. 7. 15~7. 21	1,580	1,750	1,700	900	950	1,000	0.570
2010. 8. 4~8. 10	1,400	1,600	1,500	1,050	1,100	1,200	0.750
2010. 8. 25~8. 31	1,400	1,600	1,600	1,050	1,000	1,100	0.750
2010. 8. 31~9. 6	1,400	1,600	1,600	1,100	1,200	1,150	0.786
2010. 9. 30~10. 6	1,300	1,380	1,400	900	1,000	900	0.692
2010. 10. 12~10. 18	1,300	1,350	1,550	800	900	830	0.615
2010. 10. 26~11. 1	1,350	1,250	1,400	900	800	900	0.667
2010. 11. 24~11. 30	1,400	1,450	1,400	750	800	900	0.536
2010. 12. 7~12. 13	1,750	1,800	1,800	1,250	1,300	1,350	0.714
2010. 12. 17~12. 23	2,000	2,050	2,100	1,100	1,250	1,300	0.550
2011. 1. 12~1. 18	3,100	3,300	3,300	1,800	2,200	2,300	0.581
2011. 2. 8~2. 14	3,000	3,100	3,100	2,200	2,150	1,900	0.733
2011. 2. 22~2. 28	3,050	3,000	3,000	1,900	1,800	1,750	0.623
2011. 4. 5~4. 11	3,000	2,900	2,850	1,500	1,500	1,650	0.500
2011. 4. 27~5. 3	3,150	3,200	3,200	1,800	1,900	2,000	0.571
2011. 5. 13~5. 19	2,550	2,600	2,650	1,800	1,850	1,900	0.706
2011. 6. 14~6. 20	2,800	2,850	2,900	2,000	2,000	2,100	0.714
2011. 6. 28~7. 4	2,700	2,750	2,800	1,900	1,900	2,000	0.704
2011. 7. 14~7. 20	2,570	2,600	2,650	1,900	1,900	2,000	0.739
2011. 8. 2~8. 8	2,540	2,650	2,700	2,100	2,200	2,300	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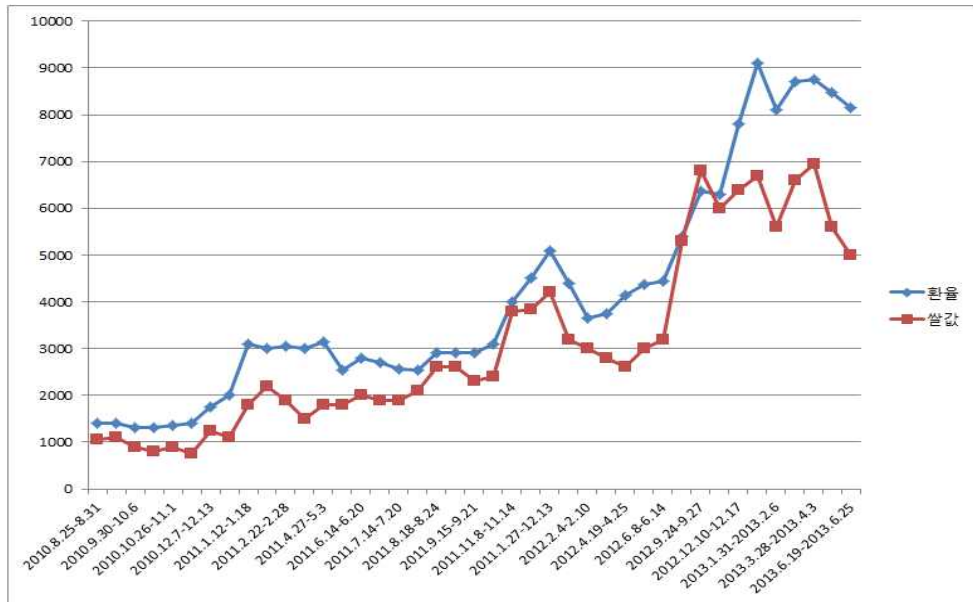
	환율(1달러당 북한 원)			쌀값(북한 원)			쌀값(달러)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2011. 8. 18~8. 24	2,900	2,800	2,850	2,600	2,500	2,500	0.897
2011. 8. 31~9. 6	2,900	2,850	2,900	2,600	2,700	2,500	0.897
2011. 9. 15~9. 21	2,900	2,875	2,850	2,300	2,300	2,400	0.793
2011. 10. 1~10. 7	3,100	3,100	3,150	2,400	2,400	2,600	0.774
2011. 11. 8~11. 14	4,000	3,900	3,850	3,800	3,700	3,500	0.950
2011. 11. 26~12. 2	4,500	4,550	4,600	3,850	3,900	4,000	0.856
2011. 12. 7~12. 13	5,100	5,100	5,200	4,200	4,300	5,000	0.824
2012. 1. 15~1. 21	4,400	4,300	4,200	3,200	3,300	3,300	0.727
2012. 2. 4~2. 10	3,650	3,690	3,720	3,000	3,100	3,100	0.822
2012. 2. 25~3. 2	3,750	3,780	3,640	2,800	2,700	2,800	0.747
2012. 4. 19~4. 25	4,150	3,900	3,630	2,600	2,600	2,800	0.627
2012. 5. 30~6. 5	4,370	4,400	4,500	3,000	3,100	3,800	0.686
2012. 6. 8~6. 14	4,450	4,470	4,540	3,200	3,400	3,900	0.719
2012. 7. 6~7. 13	5,400	5,190	5,280	5,300	4,300	5,000	0.981
2012. 9. 24~9. 27	6,370	6,450	6,500	6,800	6,500	6,300	1.068
2012. 10. 22~10. 29	6,300	6,700	6,460	6,000	6,400	6,200	0.952
2012. 12. 10~12. 17	7,800	8,000	8,450	6,400	6,800	6,500	0.821
2013. 1. 2~1. 9	9,100	8,950	8,750	6,700	7,000	6,600	0.736
2013. 1. 31~2. 6	8,100	8,000	8,350	5,600	5,500	6,500	0.691
2013. 2. 26~3. 4	8,700	8,750	8,490	6,600	6,700	6,600	0.759
2013. 3. 28~4. 3	8,760	8,810	8,530	6,950	7,000	6,850	0.793
2013. 4. 25~5. 1	8,470	8,580	8,500	5,600	5,700	6,300	0.661
2013. 6. 19~6. 25	8,150	8,120	7,860	5,000	5,400	5,500	0.613

주: 화폐개혁 이후 신화폐 기준.

자료: 데일리NK.

〈그림 1〉 최근 3년간 평양의 시장 쌀 가격 및 환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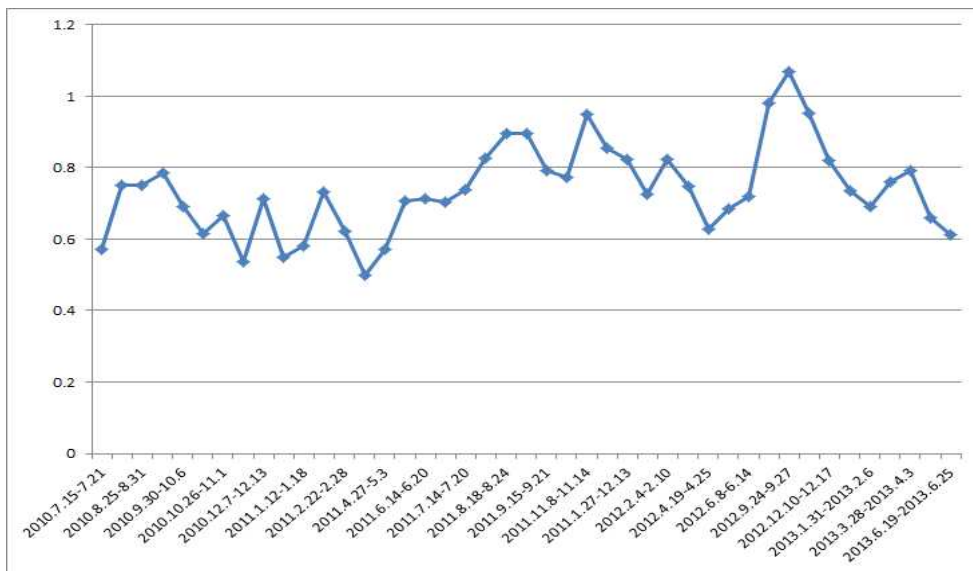
(단위: 북한원)



자료: 데일리NK.

〈그림 2〉 최근 3년간 평양의 달러 표시 시장 쌀 가격 추이

(단위: 북한원)



자료: 데일리NK.

V. 전망

시장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을 제도 내에 편입시켜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억제와 허용의 딜레마 속에서 북한정부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 넘게 시장에 대한 허용이라는 길을 택했다. 권력교체기에 민심을 달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이제 와서 시장을 없애려고 한들 과연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시장 없는 북한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장화의 정착 또는 장기화가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나아가 북한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현재 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6·28방침에 대해 1년 넘게 시범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조치가 경제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시장과의 타협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허용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갈 지(之)자 걸음이었다. 상황에 따라 허용과 억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보면 2010년 5월 이후 유지되어 왔던, 시장에 대한 허용 정책기조가 2013년 하반기 들어 갑자기 후퇴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